

중국의 패권주의

이 대 성*

요 약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유민족은 한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도 집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타민족들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고유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를 왜곡·편입하는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원자재와 운송로 확보, 군사시설 확충,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 영토 주권 등을 침해하기에 한국도 중국과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대(對)중국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China's Hegemony

Lee, Dae Sung*

ABSTRACT

China, since the early days, according to their ideology,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ir citizens were under their sphere of power. This means that only the Hanzu are real native Chinese and the other minor ethnic groups are technically immigrant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ha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Deng Xi oping took over and implemented various expansionist policies and reforms, opening china to the world. Internally, the minority ethnic groups were forcibly relocated to specific regions, prohibited from using their native languages, and their culture was absorbed or incorporated into the Hanzu culture in an attempt to internally suppress or erase them. Externally, various projects such as the '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Project', 'Northeast Project', 'Northwest Project', and the 'Southwest Project' were implemented to spread their culture and history to neighboring countries in an attempt to expand their territory. In addition, as capitalism spreads throughout china through reforms and its expansion, it has pioneered the one belt one road aiming to secure as safe transit and raw materials, expand their military facilities, and expand their export market. By doing so, China is infringing on other countries' politics, economy, and borders, and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Korea to also reexamine its policies in all fields related to china such as politics, economy, history, and culture.

Key Words: Racism, Colonialism, Capitalism, Imperialism, New Imperialism, hegemonism

1. 문제의 제기

로마와 몽골제국에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하는 ‘Empire’는 정치, 군사적 확장을 말하며 제국주의(imperialism)는 대외적 팽창주의(expansionism) 정책이나 그 정책을 유발하는 정치, 경제, 군사 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제국주의는 착취나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매도하기 위한 종교관, 인종관 등으로도 이해되었다. 유럽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배가 본격화된 계기는 15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시대를 통해 해상무역을 확보하고 아메리카, 아시아에 식민지¹⁾를 개척하였다.

19세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여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재생산하여 판매하는 체제이기에 16세기 식민주의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19~20세기 제국주의는 러시아 남방정책에 대한 영국의 무력행사와 같은 강경책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적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자유무역정책을 보호무역정책으로 전환하고 광범위한 식민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였다.²⁾

1) 1493년 3월, 콜럼버스가 1차 항해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양국의 분쟁을 로마 교황청이 중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는 칙령을 통하여 아조레스(Azores)제도와 케이프버드(Cape Verde)제도 서경 38도 위치의 자오선(meridian)을 분기점으로 동쪽은 스페인, 서쪽은 포르투갈 영토로 하였다. 둘째, 포르투갈 국왕 주앙 2세(João II)는 교황의 중재(안)에 불복하여 약1년 동안의 재협상으로 토르데시야스(Tratado de Tordesilhas)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스페인은 북(중)아메리카 대다수, 남아메리카 북서부와 남부를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남아메리카 동부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은 아시아에서 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해안의 무역 거점을, 스페인은 필리핀을 차지하였다[1][2].

2) 정고이즘(Jingoism)은 극단적이고 맹목적이며 배타적인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공격적인 외교정책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인식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생산양식의 확산은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제국주의를 홉슨(John Atkinson Hobson)이 제기한 경제적 제국주의론을 세계화된 자본주의 상황에 적용하여 갱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국주의를 자유경쟁과 세계시장의 종언으로 파악하면서 자본주의의 최종단계라고 규정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기존 식민지의 해방이 전개됨에 따라 정치적 지배와 종속의 의미에서 경제적 지배와 종속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특히 1950년대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신제국주의(new imperialism)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신식민주의(neo colonialism)로 혼용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는 미국에 의한 패권주의가 남북간의 경제적 불균형, 제3세계 저개발 등과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 and Leninism)와 마오니즘(Maoism)을 지향하는 중국공산당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과정을 패권주의 시각에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패권주의 관련 이론

2.1 인종주의와 자본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중세의 종교적 속박

이다. 자신의 집단(국가·민족)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표적 사례인 영국은 1870년대 수에즈운하 주식 매수와 인도의 지배 강화, 1880년대 제국연방동맹 성립에 의거한 자치령과 본국과의 결합 시도, 1900년대 보호관세정책과 보어전쟁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후진자본주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국가에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정책은 전(全)세계 분할로 인한 국제 대립 격화와 군비 증강으로 인한 제1·2차 세계대전 발발의 단서가 되었다[3].

에서 벗어난 합리적 이성 과 진보, 관용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역설하면서 미신과 악습을 타파하려는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인종주의(racism)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인종주의는 식민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상으로 작용하였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는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전자는 노예를 후자는 노동자를 이용하였다. 자본주의의 가치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사회이고 자본이 고리대금업이나 유통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하는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의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사회를 의미한다[4].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자본론(Das Kapital)」에서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자본가의 배타적 사적소유가 되면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들은 생산물이나 생산과정에서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만을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에 의한 갈등적 계급사회가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어느 시대나 나타날 수 있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역사상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다고 보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는 그 이전의 경제체제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물이라고 하였다[5].

2.2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레닌(Vladimir Ilich Lenin)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를 노동과 자본의 비대칭적 관계에 기반한 생산양식으로 파악하면서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 자본축적과정에서 제국주의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포괄적 정의에 필요한 5가지 요소로 첫째, 독점단계에 도달한 생산과 자본집중 둘째, 은행과 산업 자본융합, 그리고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과두제 출현 셋째, 자본수출 당위성 부여 넷째, 자본가들의 국제적 독점동맹형성 다섯째, 서구열강들에 의한 세계영토 분할완결을 제시하였다[6]. 이러한 측면에서 제국주의는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형성되어 자본수

출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자본주의자들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되어 서구열강들에 의한 모든 영토 분할이 완결된 발전단계라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국내지배와 대외팽창을 매개로 세계시장을 둘러싼 국제독점체 사이의 경제적 분할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토적 분할 경쟁을 초래하였다.

느크루머(Kwame Nkrumah)는 「신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마지막 단계(Neo Colonialism, the Last Stage of Imperialism)」에서 신식민주의를 불평등 무역, 수혜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자본수출, 교역의 인위적 조작, 개발원조 등을 통해 저개발국가들을 지속적이고 간접적으로 착취한다고 주장하였다[7].

맥도프(Harry Magdoff)는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까지(Imperialism, From the Colonial Age to the Present)」에서 선진자본주의는 상품수출을 위한 시장을 필요로 하며 제국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윤과 자본투자를 보호해야 할 목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판매할 기회의 확대는 힘에 의한 무자비한 팽창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³⁾ 맥도프는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해외시장개척은 대규모 자본투자와 새로운 시장의 개발에 필요한 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 추구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수출시장에 의존함은 불변의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⁴⁾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The Wretched of the Earth)」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는 식민주의이며 식민지 자체가 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지

3)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주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분리할 수 없다. 자본과 산업기술이 축적된 선진자본주의국가(중심부)는 저개발국가(주변부)로부터 원자재를 필요로 한다.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그 국가들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은 저렴한 안정된 자원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발생과 자본축적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8].

4) 자본투자는 해외시장의 발전과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철도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철도건설은 철, 강철, 기계산업 등과 이외의 부수적 상품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9].

배체제에서 기인한 식민지배자(지배민족)에 의한 피식민지배자(피지배민족)에 대한 억압, 착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문화 등의 고리를 단절하여 새로운 민족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농은 현재 서구열강국들이 향유하고 있는 경제력은 원천적으로 식민지배를 통한 약탈과 수탈의 결과이므로 식민지국가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10].

3. 중국의 패권주의 진행 과정

3.1 민족말살정책을 통한 영토확장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sinocentrism)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이 자신의 세력권에 속해 있다는 시각이었다. 이는 한족(Hanzu)만이 중국의 고유민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⁵⁾이라는 것이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Mao Zedong)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을 건국하고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전개하였으며 이민족을 철저히 배척하는 정치사상가였다.⁶⁾ 그러나 마오쩌둥을 계승한 덩샤오핑(Deng Xiaoping)은 1978년 3월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 이론은 통일적 중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민족⁷⁾의 독립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영

토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중화사상의 유구함과 한족의 위대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목적을 내포한 신중화주의(neo sinocentrism) 문명사관이다. 중국의 역사문화공정(Chinese Historical and Cultural Project)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14]. 첫째, 중국의 건국부터 현재까지 영토를 최대1만년 이상 확장하기 위하여 하상주단대공정(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과 중화문명탐원공정(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Project)을 하고 있다. 둘째, 요하문명의 발견으로 붕괴된 중화주의를 복원하기 위하여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한 동북공정(Northeast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북한 붕괴 이후, 발생 가능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둘러싼 영유권과 연변지역에 대한 분쟁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기만술이다. 셋째, 1755년 청나라 영토로 편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장지역을 영구히 복속시키기 위한 서북공정(Northwest Project)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1950년 3월부터 1951년 5월 사이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해 강제로 합병된 티베트지역도 서남공정(Southwest Project)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3.2 일대일로를 활용한 경제구상

2011년 3월 중국⁸⁾은 유라시아대륙 15개국을 연결하는 국제화물열차(China Railway Express)를 개통하여 유럽과 직접적인 교역을 시작하였다. 2014년 11월 시진핑(Xi Jinping)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서 대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국 인구는 44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63%이며 경제는 21조 달러로 세계경제의 29%를 차지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금융·산업기반·물류·교통·통신 등으로 연결하였고 136개 국가와 30개 국제기구가 참여를 위해 173개 협약과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16].

일대일로는 크게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5) 한족이 거주하는 양쯔강과 황허강을 중국의 문명발상지인 중화로 보고, 그 주변부 동서남북에 거주하는 타민족들을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표현하였다[11].

6) 마오쩌둥은 중국역사에서 원나라와 청나라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청나라 역사를 배척하면 중국역사가 단절되기에 이를 중국역사에 포함하였다[12].

7) 중국 전체인구는 약13억명으로 추정하고, 한족과 56개 타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중국의 민족구성비와 거주지역으로는 한족 98%(12억 3천만명으로 중국 전지역), 장족 0.16%(1천 6백만명으로 광시 좡족자치구), 만주족 0.1%(1천만명으로 랴오닝성), 중국계 무슬림 후이족 0.9%(9백 8십만명으로 닝샤 후이족자치구), 튀르크계 위구르족 0.08%(8백 3십만명으로 신장 위구르자치구), 몽골족 0.06%(5백 8십만명으로 내몽골자치구), 티베트족 0.05%(5백4십만명으로 티베트자치구), 조선족, 0.02%(2백만명으로 연변 조선족자치구) 등이 있다[13].

8) 중국은 유라시아대륙 동쪽 지역에 위치하여 2만2천km의 육로를 따라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해양으로 1만8천km의 해안선, 300km의 해안, 6,500여개 섬을 보유한 대륙해양복합형 국가이다[15].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이 있는데, 1노선은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이고 2노선은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지중해이며 3노선은 중국-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이다. 후자는 2개 노선이 있는데, 1노선⁹⁾은 중국연해-남중국해-인도양-유럽이고 2노선은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이다 [17].

일대일로는 5개 분야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협력(안)은 첫째, 관련국과 정책교류 확대를 통한 신뢰구축과 협력기반강화 둘째, 인프라 정비를 통하여 국가간 기초설비건설계획, 기술표준시스템 연계강화, 항만기초설비건설, 육로·수로 연결망, 항공망 등 협력강화, 에너지기초설비연계망, 광케이블 등 상호연결과 건설협력강화 셋째, 교역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동자유무역지대 건설확대 추진, 검역·인증 등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상호간 무역·투자 등 협력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 규범 마련, IT·BT·신에너지·신소재 등 첨단산업영역 협력 확대 넷째, 금융협력 확대를 위하여 아시아 통화안정을 위한 금융협력시스템 강화, 참여국 통화사용확대,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신개발은행(NDB) 등 확대, 실크로드기금 운영촉진, 주변부정부와 고신용등급기업의 중국내 채권발행지지 다섯째, 민간교류활성화로 참여국과 문화·관광·교육 등의 교류 확대가 있다[18].

일대일로는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도로·철도·수로·파이프라인·정보망의 6개 인프라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의 여러 항구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6대 경제회랑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신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중앙아시아-서부아시아 경제회랑, 중국-인도-중남반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확대를 위하여 유럽, 아시아, 아

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함과 동시에 철도, 항만, 도로 등의 건설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19].

4. 중국의 패권주의 한계

4.1 영토확장으로 인한 무력 충돌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신장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에너지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은 민족 정체성, 종교탄압, 문화충돌, 정치소외, 경제 빈곤, 강제결혼 등으로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위구르족은 외부세력의 지원없이 유혈사태를 단독으로 감행하거나 인접국의 위구르족과 연대할 경우, 그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실제로 신장지역의 분리독립을 주장하거나 지원하는 세력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동투르키스탄 해방조직(ETLO),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동투르키스탄 정보센터(ETIC), 세계위구르협회(WUC), 세계위구르청년동맹(WUTYC) 등이 있다 [20][21].

티베트지역은 고원지대로 군사전략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곳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티베트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족은 민족정체성, 환경파괴, 종교 탄압, 문화충돌, 거주제한 등으로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1959년 인도로 망명한 14대 달라이 라마(Dalai Lama)에 의해 티베트 망명정부(The Government of Tibet in Exile)가 수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리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망명정부가 수립된 1959년 전격적으로 시작된 티베트시위는 1989년 정점이었고 2008년 3.14유혈사태는 티베트분리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22][23].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 맥클스필드암초(Macclesfield Bank), 프라타스군도(Pratas Islands) 등으로 구성되었고 군사전략 요충지이며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대만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해양지형물 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해양영토

9) 1노선을 국가와 거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처드 베이(Richards Bay)-탄자니아 바가모요(Bagamoyo)-지부티 오보크(Obock)-수단 포트 수단(Port Sudan)-파키스탄 과다르(Gwadar)-몰디브-스리랑카 콜로보(Colombo)와 함반토타(Hambantota)-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미얀마 시트웨(Sittwe)와 차우퓨(Kyaukpyu) 등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분쟁을 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세안 5개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는 강대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 연대하여 남중국해 분쟁은 지역분쟁이 아닌 국제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24][25].

이 외에 중국은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 위치한 5개 무인도와 3개 암초로 구성된 센카쿠 열도(Senkaku Islands),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북동부에 인접한 카슈미르(Kashmir)지역, 그리고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지역 등에서도 영토분쟁 중이다[26].

4.2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분쟁 발생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고 군사강국인 중국과 다양한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경제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일대일로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와 성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육로와 해로의 모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68개국에 약8조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일대일로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들의 부채율은 35%에서 126%로 급증하여 금융취약국으로 전락하였다. 미국세계개발센터(CGD)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경제성장률(GDP) 대비 공공부채율이 몰디브 100%, 몽골 90%, 지부티 87%, 키르기스스탄 78%, 라오스 70% 증가하였고,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몬테네그로 등 국가도 대규모 부채상환 리스크(risk)가 있다고 발표하였다[27][28].

< 표 1 > 일대일로 분쟁(사안)

국 가	사 업 내 용
시에라리온	공항프로젝트 취소
헝가리	고속철도 불확실
세르비아	고속철도 불확실
지부티	중국자금지원 공항승인 거부
케냐	나이로비 철도건설 중단

탄자니아	바가모요항 건설 재협상
짐바브웨	중국이 태양광 계획자금지원 철회
사우디아라비아	시노팩 합작 투자 소송
카자흐스탄	20억 달러 경전철사업 중단
키르기스스탄	철도노선 변경
파키스탄	다이메르 바샤담 건설사업 중단
몰디브	부채로 국가부도 위기
스리랑카	부채반환권 요구로 항구운영권 탈취
네팔	부디 간다키 수력발전소 계약 취소
방글라데시	항구건설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
미얀마	미트소네담 건설사업 취소
태국	고속철도사업 지연
호주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사업 무산

미국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아시아, 유럽 34개국에서 추진하는 교통인프라구축 사업에서 89%가 중국기업들을 시공사로 낙찰·선정·계약하여 참여국이나 협력국에 배정된 몫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의 핵심인 다이메르 바샤담 건설이 중국기업에게 수주되어 사업을 중단하였다. 둘째, 베트남은 2018년 6월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장99년간 토지임대를 허용한 조항을 포함한 경제특구조정관련법(안)이 발표되자, 반중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셋째, 스리랑카는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중국국영기업에게 99년간 양도하였다. 넷째, 네팔은 중국과의 마찰로 세티 수력발전사업을 네팔국영기업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미얀마는 미트소네담 건설사업을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다섯째, 호주는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부설사업을 자국안보에 위협이라고 무산시켰다[29].

5. 결어

1949년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였고 이를 계승한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과 실용주의로 현재의 중국을 이끈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1990년 집권한 장쩌민(Jiang Zemin)은 덩샤오핑의 권력을 승계받은 후,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고 2004년 권력을 계승한 후진타오(Hu Jintao)는 미국과 함께 중국

이 G2국가로서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과 공존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의 하드파워(hard power)인 경제, 군사력에 비하여 소프트파워(soft power)인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식하였다. 그 해결책은 중화사상과 한족의 위대함을 내포한 신중화주의 문명사관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국역사문화공정은 서북공정, 서남공정,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한계, 민족·문화적 이질감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2013년 후진타오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시진핑은 중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한 일대일로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후진타오가 협력과 상생으로 중국을 G2국가로 부상시켰다면 시진핑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한 대규모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중국을 완전한 패권국가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국제사회의 경제구조와 안보환경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유럽, 중앙아시아, 서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아메리카 등에서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취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시공사를 낙찰·선정하고,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수익배분을 불이행하여 중국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사업과정에서 중국이 참여국의 영토, 외교, 경제주권 등을 침탈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고대부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 한족을 포함한 북방 타민족과 영토 전쟁을 하였고 현재도 영토 전쟁(분쟁)은 진행 중이다. 만약 한국(Republic of Korea)에 의해 통일국가가 탄생한다면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200만 조선족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의 민족의식이 고취되어 분리독립을 주장한다면 티베트지역 티베트족, 신장지역 위구르족, 내몽골지역 몽골족 등 타민족의 분리독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를 경계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의 통일에 대

비하여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과거 티베트지역처럼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을 주둔시키거나 괴뢰정권을 수립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의 거점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륙 경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와 남북한 통일 과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통일 한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구상, 그리고 북방경제협력 등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이용선, “스페인과 영국의 아메리카식민지정책 비교 연구”, 『스페인어문학』, 76: 285-313, 2015.
- [2] 서성철, “신세계에서의 포르투갈 유대인과 종교재판”, 『이베로아메리카』, 17(1): 61-91, 2015.
- [3] <https://www.thoughtco.com/jingoism-4691810>: 2020.10.13.
- [4] <https://ieec.kdi.re.kr>: 2020.10.13.
- [5] <https://plato.stanford.edu/entries/marx>: 2020.10.17.
- [6] https://www.files.ethz.ch/isn/125485/6000_Imperialism_Highest_Stage_Capitalism.pdf: 2020.10.19.
- [7] <https://politicalanthro.files.wordpress.com/2010/08/nkru-mah.pdf>: 2020.10.20.
- [8] https://books.google.co.kr/books?id=A9pWCgAAQBAJ&printsec=frontcover&source=gbs_book_other_versions_r&redir_esc=y#v=onepage&q&f=false: 2020.10.22.
- [9] <https://monthlyreview.org/2007/03/01/imperialism-in-tribute-to-harry-magdoff>: 2020.10.23.
- [10] <http://abahlali.org/wp-content/uploads/2011/04/Frantz-Fanon-The-Wretched-of-the-Earth-1965.pdf>: 2020.10.24.
- [11] 허평길,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사상: 중화사상의

- 형성과 변화”, 「한국민족문화」, 10: 169-203, 1997.
- [12] 신용우·오원규, “중국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지적」, 44(1): 37-59, 2014.
- [13]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C%9D%98_%EB%AF%BC%EC%A1%B1: 2020.10.24.
- [14] 홍면기, 「영토적 상상력과 통일의 지정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158. 2006.
- [15] <http://preview.britannica.co.kr>: 2020. 10. 13.
- [16] 이경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무역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84: 169-188, 2019.
- [1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262273i>: 2020. 10. 24.
- [18] 이수행 외,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사점”, 「이슈와 진단」, 193: 1-25, 2015.
- [19] 조영삼·최낙섭·김양팽·김단비,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세종: 산업연구원, 1-220, 2016.
- [20] 이대성·김태진, “중국의 테러리즘 분석과 그 전망: 신장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18-226, 2014.
- [21] 이대성·안영규, “중국의 반테러리즘법 제정을 위한 검토: 미국·영국·독일과 비교하여”, 「융합보안논문지」, 14(6): 45-55, 2014.
- [22] 심혁주, “티베트독립운동의 현단계와 역사적 배경”, 「내일을여는역사」, 39: 193-214, 2010.
- [23] 최지영, “티베트망명정부의 정치적 노선갈등과 중국의 정책”, 「중소연구」, 34(1): 15-46, 2010.
- [24] 이은택·남궁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 공격적 현실주의의 접근”, 「국제관계연구」, 24(1): 81-132, 2019.
- [25] 안슬기,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정책: 시진핑의 해양사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2(1): 61-91, 2019.
- [26] 이동률, “시진핑정부 ‘해양국가’구상의 지정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367-401, 2017.
- [27] 차재복,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

에 대한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60: 160-195, 2018.

- [28] 양평섭·박영호·이철원·정재완·김진오·나수엽·이호진·조영관,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99, 2018.
- [29]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53/344/53_344_file_pdf_1538461173.pdf: 2020.10.25.

【저자소개】



이대성 (Lee, Dae Sung)

동국대학교 법학사
 동국대학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형사학박사
 現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교수

email : dorian3145@daum.net